

# 목포시, 대양산단 부서별 분양책임제 성과

시행 한달만에 7개 업체 계약 분양률 50% 돌파 눈앞 채무상환 위한 방안도 마련 지방채 1300억원 발행키로



목포시가 민선 7기 김중식 시장 체제 출범이후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 시행한 '부서별 분양책임제'가 성과를 거두면서 분양률 5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양산단 전경.

목포시가 민선 7기 김중식 시장 체제 출범이후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 시행한 '부서별 분양책임제'가 성과를 거두면서 분양률 50%를 달성해 눈앞에 두고 있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 재정압박 요인인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분양책임제를 도입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건축행정과 1곳, 도시계획과 1곳, 성장동력실 4곳(이상 산업용지), 산정동 1곳(지원용지) 등 7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분양면적 213필지 106만 8606㎡ 가운데 총 128필지 52만 4452㎡가 분양돼 분양률 49.1%를 기록했다.

앞서 김중식 시장은 지난해 매출 초개최하는 시정현안 업무보고 회의 시 부서별 기밀유지 책임분양제 활동 사항을 첫 번째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성장동력실 등 특정 부서에만 한정됐던 대양산단 분양노력이

전 부서로 확대돼 시청 산하 전 직원이 세일즈 행정에 나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게 시청 안팎의 평가다.

전 직원이 대양산단 세일즈에 나서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았다는 점도 성과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대다수가 현재 기본 분양면적이 1000평 규모로 초기 부지매입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는 점과 입주업체가 한정돼 있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다는 점 등 두 가지다.

이에 김 시장은 특정 블록을 정해 1000평을 500평으로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요 예측과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김 시장은 "현재 접촉 중인 업체들이 목포시 관내 업체가 적지 않다"면서 "분양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가급적 외지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목포시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양산단 채무 상환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목포시가 밝힌 대양산단 대출액은 총 2720억 원(고정금리 연 3.4%)으로 2016년 260억, 2017년 350억, 2018년 220억 등 총 830억을 상환해 대출 잔액은 1890억 원 규모다.

이에 목포시는 전남도지역개발기금 500억원과 목포시금 800억원 등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했다.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증채무 이행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분양 기간 확보를 위해 1800억원 중 13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500억원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주)과 기간연장, 적용금리 등 금융약정서 변경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이 승인 될 경우, 전남도 지역개발 기금은 이자율이 2%, 시금고인 기업은행 금리는 1.9%로 현행 이율 3.4%보다 훨씬 낮아 연간 18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봤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서남권 미래 먹거리 발굴' 큰 그림

목포시 '종합발전 기본 구상 수립' 용역 발주

9개 시·군 광역경제권 묶어 상생 발전 중점 과제 추진



김중식 목포시장

목포시가 서남권 9개 시·군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최근 목포시는 최근 서남권 미래전략 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나주 혁신도시, 무안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등 정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서남권을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종합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서남권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 환황해권 경제 벨트의 시작점으로서 위상제고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게 목포시의 구상이다.

이는 김중식 목포시장이 후보시절 내건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서남권 경제통합'과 일맥상통한다. 당장 물리적 통합은 어렵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목포를 포함한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영광, 함평 등 9개 시·군으로, 시간적 범위는 2019년-2030년까지다. 단,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단기(2019-2021년), 중기(2022-2025년), 장기(2026-2030년)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아울러 이번 용역에는 서남권 광역경제권 개발 비전과 기본 구상을 비롯해 중점 과제별 추진계획, 민간자본 유치 촉진 방안, 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도 담겼다.

이와 관련 김중식 시장은 "이번 용역은 서남권 경제통합을 위한 첫 걸음으로 서남권 종합발전(연계협력형 지역계획) 기본 구상과 중점 과제별 추진계획(서남권 미래 전략 산업 등 프로젝트)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김 시장은 "지역별 자원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동발전 테마를 설정하고 시·군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하는 게 목표"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핵심 자원 등을 연계한 광역적인 루트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김 시장은 "기존 지역계획에 포함 된 지역개발 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한편 하드웨어 사업이나 1+1 사업은 고급적 지향하고 지역가치 재창출 사업과 지속적인 연계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본 구상에 부합하는 중점 사업을 선정하되,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한 중점 사업부터 추진방안을 구체화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서남권 미래 전략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해양관광 산업 육성(필수)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필수) ▲수산식품 산업 육성(필수) ▲서남권 물류 거점 육성 ▲중국어 남북교류 협력 사업 ▲각 지자체별 특화산업 육성 ▲서남권 지역 연계 협력사업 발굴(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근 지자체와 공동 사업 추진을 논의하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달 중에 9개 시·군 기획예산과장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거쳐 연말 안에 전남 서남권 9개 시장·군수 회의의 열고 서남권 공동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목포시의회 단체 유럽 연수 꿈수?

관광성 외유 비난 피하려 견학 시설 끼워넣기 지적

목포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실시하는 유럽 해외 연수를 두고 지역민들의 시선이 뜨겁다.

이번 국외연수 국가는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4개국으로 경비는 의원 1인당 315만원(자부담 65만원 포함)이다.

7일 목포시의회가 밝힌 연수 일정에 따르면 도시정비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 친환경 녹지도시 개발 실태, 관광자원 활용 방안, 사회복지 시설과 쓰레기 소각시설 견학 등으로 짜여졌다.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도시건설-관광경제-기획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와 관련된 시설 1-2군데를 교묘하게 끼워 넣어 짜깁기를 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당초 취지를 살려 연수의 내실을 기하려면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연수는 시의회 전체가 동일한 국가로 떠나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시설을 끼워 넣다보니 빚어진 현상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로 인해 정말로 연수 효과가 있을지,

그럴까한 포장 속의 여행에 불과한지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10대 의회에 이르도록 수십 차례 해외연수가 실시됐지만 연수 이후 시의회 홈페이지에 견문 보고서를 게재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극소수의 의원만이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게 고작이다.

이에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려면 연수 이후 견문 보고서 홈페이지 게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목포시의회는 전체 22명 의원 중 13명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떠나는 해외연수에서 외유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7일 현재 불참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6명. 모두가 재선 이상의 다선의원들이다. 정작 연수를 떠나야 할 의원은 불참하고 안가도 될 의원들은 연수를 가는 셈이다.

한편 타 지역 기초의회 일부는 올해 단체 해외 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목포시의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 "휴일 미운행 공용차량 무상 이용하세요"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최광섭)이 지역 공기업 최초로 휴일 미운행 업무용 차량(사진)을 주민들에게 무상공유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산강사업단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 무상공유 서비스는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농어촌 사회적 약자인 교통·이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보험은 공사 부담이나, 각종 통행료, 주유비, 주차요금, 범칙금 등은 본인(사용자)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자유로운 용도로 쓸 수 있다.

제공되는 차량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관리 중인 1년 이내 출고된 소형 화물트럭(1t, 5인승)으로써 대인·대물 배상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했다.

차량이 필요한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목포시 상동 509) 방문 및 팩스(061-276-3980), 유선(061-270-6437)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수령·반납은 영산강하구둑관리소(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21-1), 영암 금호방조제관리소(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611)에서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업무용 차량 무상공유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이동 취약계층의 근·원거리 이동, 이사 및 각종 짐(화물) 운반 등에 도움을 주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산의 대국민 공익활용을 통한 농어촌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는 올해 운영 성과, 지역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서비스 대상 차량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